

## 현장의 빈일자리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고, 업종별 정책지원방안 7월 중 마련

- 신속취업지원 전담반(TF) 운영으로 1.6만명 채용지원, 음식업·숙박업 등 인력 애로 해소
- 6월중 업종별 전문가·관계부처 공동 「빈일자리 현장 점검반」 설치·운영
- 7월중 「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」 마련·발표 추진

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6.14.(수) 8시,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(TF)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8일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보완추가하여 7월 중 제2차 대책을 발표하고, 전문가도 참여하는 현장 점검반을 이달 중 운영한다고 밝혔다.

①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실적(5월 말): 신속취업지원 전담반(TF, '22.8.~)을 통해 구인난 업종에 1.6만명 채용을 지원하고,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1,409명 선정했다. 계절근로자(E-8) 쿼터를 확대(+1.3만명)하고, 체류기간을 연장(5개월 → 5+3개월 이내)했다. 재외동포(F-4)도 음식점업 및 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\*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.

\*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호텔서비스원 그외 숙박시설 서비스원

②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: 기존 6대 업종 대책 보완, 국내건설·해운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선정해 2차 대책을 마련하여 7월 중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. 인력유입, 근로조건 개선, 매칭지원, 외국인력 활용 등 부문별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이다.

\* 구인난 6대 업종: 제조업(조선·뿌리), 물류운송업, 보건복지업, 음식점업, 농업, 해외건설업  
추가 4개 업종: 국내건설업, 수산업, 해운업, 자원순환업

③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「빈일자리 현장 점검반」을 6월 중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
정부는 일자리 전담반 및 현장 점검반을 중심으로 철저히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가는 한편, 하반기 일자리 상황 점검 및 추가적인 일자리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	책임자	과 장	김준호 (044-202-7962)
		담당자	서기관	이지은 (044-202-7214)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시동 (044-215-8530)
		담당자	사무관 사무관	김요균 (044-215-8531) 김범석 (044-215-8533)

